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

- '26.10.30, 한국수소연합 국제협력실 -

◇ 매일 국내·해외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 관련 주요 이슈를 선별·요약하여 배포함

□ 국내

○ 韓총리 "현대차그룹 새만금 9조 투자 차질 없게…범정부 선제 지원" ('26.10.28, 서울경제)

- 정부는 새만금 개발 목표를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앞당기고, 민간 중심 개발에서 공공 주도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임
- 현대차그룹의 9조 원 투자 계획을 계기로 AI·로봇·수소·재생에너지 등 미래 첨단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새만금을 육성할 방침임
- 산업용지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10GW 기반을 마련해 새만금의 산업·일자리 효과를 전북 전역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임

○ 육군 'SEP 2026' 계기 '수소활용 제도' 마련 속도..산학연 MOU도 체결 ('26.10.28, 머니투데이)

- 육군은 '제3회 육군에너지 정책 포럼'에서 군 내 수소충전소 설치 및 이동식 수소충전시설 운용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
- 개정안은 군용 수소시설 설치 시 관할 관청과의 협의로 허가를 갈음하고, 관계기관 합동검사 및 이동식 수소충전시설 운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
- 육군은 기후에너지환경부, 한국원자력연구원, 한국자동차연구원,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차세대 에너지 기술 공동개발 및 군사적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

○ 野이종배 "에너지 자립, 대한민국 생존 과제…수소 경제 뒷받침할 것" ('26.10.28, 머니투데이)

- 국회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 이종배 의원은 'SEP 2026' 축사에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에너지 자립 중요성을 강조함
- 수소·재생에너지·원전과 에너지저장장치(ESS·BESS·HESS), AI 기반 에너지 최적화 및 가상발전소 기술이 에너지 자립의 핵심이라고 설명함
- 특히 수소의 에너지 저장·운송 및 산업 분야 활용 가능성을 강조하며, 관련 기술의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 마련과 예산 지원을 약속함

○ 수소차 발목 잡는 지자체 재정난 … 정부 보조금 '그림의 떡' ('26.10.28, 매일경제)

-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수소차 보조금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며, 올해 수소승용차 국비 지원 물량 6,000대 중 5,093대(84.9%)만 지방비가 확보됨
- 수소상용차 역시 국비 지원 물량 1,800대 중 1,270대(70.6%)만 지방비가 확보됐으며, 내년도 수소차 및 충전 인프라 예산 삭감으로 시장 위축이 우려됨
- 전문가들은 국비·지방비 매칭 방식 개선과 보조금 집행 유연성 확대를 제안했으며, 수소차 보급 부진이 약 3,000개 관련 기업과 연료전지 기술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함

□ 해외

○ [영국] 영국, 가스 운송업체 대상 수소 지원 부담금 폐지 ('26.10.28, Hydrogen Insight)

- 영국 정부는 가스 운송업체에 부과해 그린수소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었던 가스운송업체 의무부담금(GSO, Gas Shippers Obligation)을 폐지하고, 관련 사업을 정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기로 함
- GSO는 수소생산지원제도(HPBM, Hydrogen Production Business Model)의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며, 가스 운송업체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음
- HPBM은 저탄소수소와 고탄소 연료 간 운영비 격차를 보전해 수소 생산자의 사업성을 지원하는 제도로, GSO를 장기적인 재원 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음
- 정부는 당초 GSO를 통해 2028년부터 연간 약 1.5억 파운드(약 2,800억 원)를 조달할 것으로 예상함
- 부담금 도입 시 일반적인 가구의 연간 에너지 요금이 2.60~4.50파운드(약 5,000~8,000원) 증가하고, 기타 가스 사용자의 비용도 최대 2%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
- 정부는 가계 에너지 요금 상승 부담을 주요 폐지 사유로 제시했으며, HPBM의 향후 재원 규모와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음

○ **[EU] 네덜란드, EU에 비료·식품 등 대상 그린수소 사용 의무 확대 촉구 ('26.10.28, Fuel Cells Works)**

- 네덜란드 기후정책·녹색성장 장관은 산업가속화법(IAA, Industrial Accelerator Act)을 활용해 비료·식품 등 다양한 제품에 그린수소 사용 의무를 도입할 것을 EU에 촉구함
- RED III 수송부문 의무화가 시장 확대와 투자 결정(FID)을 촉진한 사례를 바탕으로, 최종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분야로 수소 사용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함
- 청정수소 기반 비료를 활용해 감자를 생산할 경우 벨기에 감자튀김 한 봉지당 0.01유로(약 17원) 미만의 비용만 추가되는 사례를 제시함
- 비료산업 자체에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IAA의 '선도시장(Lead Markets)' 제도를 활용해 식품산업에 의무를 부과, 최종 소비자에게 비용을 분산하는 방안을 제안함
- 현재 RED III는 2030년까지 수송연료의 1%를 RFNBO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유럽 내 다수 수소 프로젝트의 최종투자결정(FID)을 촉진한 것으로 평가됨
- 네덜란드 정부는 그린수소 수송부문 의무를 2040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교통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힘
- 또한 RED IV에서 기존 RED III 의무를 약화하는 방안에는 반대하면서도, 시장 작동을 개선하는 수준의 목표 조정·최적화는 지지할 수 있다고 밝힘